

# 전남도, 정부에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건의

## 김성환 기후부장관 첫 호남 방문…현안 논의 계통포화 해소·송배전 설비 등 국비지원 요청

전남도가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며, 에너지 신산업 거점화를 위한 정부 협력을 본격화했다.

전남도는 22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 발전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 취임 이후 첫 호남 방문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신정훈 국회의원, 김동철 한전 사장, 윤병태 나주시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박진호 총장대

행 등 지역 에너지 생태계를 이끄는 주요 인사 15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안정적 추진과 재생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이 정부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인센티브를 토대로, 에너지 분야 특별법에 필수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부의 역할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구제 과제로 태양광 50MW, 해상풍력 100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방안

과 함께 해상풍력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인프라 지원,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계통 포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 과제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대폭 확충, 한전의 허수사업자 정비, 노후 송전선로의 신속한 교체를 통한 계통 여유 확보를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시기의 조기화와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송·배전 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함께 갖춘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후부와 한전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는 22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발전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 “6월 지방선거 땐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따로 뽑자”

광주교육청, 교육행정통합 놓고 교육가족과 공개 소통

학부모·교직원·시민 200명 참여…우려·불안 목소리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광주교육 현장에서 이번 선거만큼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행정통합 논의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 교육자치와 현장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동부권 교육가족 공청회’를 열고 교육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통합 이후 교원 인사 안정성 확보 방안,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행정 체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교육행정통합 논의와 교육

감 선거를 동일 선상에서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한 학부모는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까지 함께 통합할 경우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통합 여부는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직원들의 우려도 컸다. 한 교사는 “특별법에 인사 안정 방안이 담긴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까지 함께 치르면 교원 인사와 학교 운영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구성원 간 충분한 숙의가 선행해야 하며, 당분간은 광주와 전남 교육청이 각각 운영되는 체제를 유지하는 방



광주시교육청은 22일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동부권 교육가족 공청회’를 열고 교육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동부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23일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 및 시민단체 공동 토론회 △26일 서부권 교육가족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교육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론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고, 통합 과정에서도 교육자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며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김영록 지사, 광양 산불 진화 현장 지휘

민관군 공조체계 밤샘 총력 대응…주불 진화 완료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광양 옥곡 산불 현장과 발화지점을 살핀 후 민관군 공조로 이뤄진 주불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광양시장과 함께 현장을 지휘했다. 이후 인명피해 없이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은 21일 오후 3시 31분께 광양 옥곡면 묵백리 일원에서 발생했다. 주택과 재비화로 추정된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산림청과 소방,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하에 밤샘 진화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임차헬기 4대를 포함해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진화헬기 26대, 진화차량 108대, 공무원과 산불특수진화대 연인원 1천500여 명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으며, 주택, 학교 등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초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곡면과 진산면 주민 338가구, 601명을 인근 대피소로 분산해 대피 조치하고, 전

남도와 적십자사의 긴급 구호물품도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강풍과 야간 산불이라는 악조건에서도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를 비롯한 민관군의 탄탄한 공조체계와 총력 대응 덕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빠른 시간에 진화할 수 있었다”며 “진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끝까지 민가 피해나 인명사고 없이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피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남도는 광양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 구호 지원과 건조기 산불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잔불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산불 피해 면적 산출과 원인조사를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 광주시, 전국 지방소비세 29조 총괄 관리

올해 행안부 납입관리자로 선정…연 100억 이자 수입

광주시가 29조원 규모의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한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약 29조원의 전국 지방소비세 자금을 총괄 관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난 2010년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국제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했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이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납입받아, 안분 기준에 따라 전국 시

도, 시군구, 교육청에 배분한다.

납입관리자는 분기별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이자 수입이 1년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납입관리자 선정은 광주시가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재정 자주도 등 지표에서 선정 당위성을 입증한 결과”라며 “전국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소비세를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배분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1면 ‘제2 푸바오’서 계속

사육사 14명과 수의사 4명을 포함해 모두 34명이 근무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도 이곳에 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우리 동물원은 그동안 동물 보호와 진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며

“판다 입식이 결정되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운영 전반을 자립 없이 준비하겠다. 또한 동물복지, 멸종위기종 보전, 관광 활성화, 국제교류를 아우르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이바오와 러바오를 한국에 보냈고, 이후 푸바오와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태어났다. 푸바오는 만 4세가 된 2024년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현재 국내 판다는 총 3마리다.

## 전남도, 신규 김 활성처리제 현장 보급 착수

파래 제거·균 억제효과·작업시간 단축·비용절감 기대

전남도가 파래 제거와 균 억제 효과를 크게 높인 신규 김 활성처리제를 어업 현장에 본격 보급한다.

작업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되면서, 김 양식 현장의 오랜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맞춰 수협청 양회와 고흥·해남·진도·신안 등 4개 수협과 협력해 개발한 신규 김 활성처리제를 현장에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비세를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배분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 신규 활성처리제는 기존 제품에 비해 파래·요각류 제거 효과가 3배, 균 억제 효과는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시간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연간 사용량도 기존의 8분의 1로 감소해 약 88%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5년 대규모 시험양식을 통해 성능과 작업 편의성이 검증되면서 어업인 만족도가 높았고, 불법 무기산을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약제로 현장 보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 조사 연구용역도 추가로 추진한다.

완도급일수협과 완도소안수협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해 양식효능 시험과 함께 환경 영향과 안전성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신규 활성처리제 사용을 희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시험어장을 지정해 약제를 보급하고, 현장 효과를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울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협약을 추진해 민간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용법 교육과 설명회도 병행된다. 전남도는 약제 사용 방법을 담은 홍보영상과 안내자료를 배포해 어업인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청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신규 김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 어업인이 오랫동안 겪어온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고시 개정에 맞춰 신속히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향철위 ‘여객기참사’ 정보공개 10건 중 2건”

정준호 “사고조사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 회복해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향철위)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관련 정보를 10건 중 2건밖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철위원장은 참사 이후 외부 소통을 단 1회 진행했다.

22일 여객기참사 국정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사진)이 향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객기 참사 이후부터 지난 15일까지 유가족, 경찰, 조종사노동조합연맹이 관련 정보공개를 10회 요청했지만 향철위는 단 2회 공개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향철위원장은 참사 관련 브리핑 등 공식적 외부 소통에 단 1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철위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외부 소통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참사 이후 유가족은 5회, 경찰 4회, 조종사노동조합연맹 1회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개된 자료는 ‘유가족 설명회 자료(11차) (2025년 9월 2일)’ 관련 2회에 그쳤다.

향철위는 의결을 통해 8회에 걸쳐 정보비공개를 결정했는데, 비공개된 내역은 △CVR(음성기록장치), FDR(비행자료기록장치), 교신기록, 항적기록 △엔진 이상 관련 자료 △사고조사 보고서 △사고조사 브리핑 자료 및 태극공항 영상자료



△CVR 내용 공개 경위에 대한 질의 △무안공항 건설공사 및 개량사업 서류 일체 등이다.

향철위원장은 사고 이후 유가족 및 언론 대상 공식 외부 소통도 지난해 7월 19일 무안공항에서 진행했던 ‘유가족 전체 연진정밀조사 결과 등’ 설명회 참석 1회에 그쳤다. 사고 조사와 원인 규명을 총괄하는 향철위원장이 외부 브리핑과 설명회, 간담회 참석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준호 의원은 “향철위가 그동안 정보 공개에 너무나 미온적이었다”며 “개인정보도 아니고 국가기밀도 아닌 정보이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자료가 제출되기도 했는데, 왜 유가족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조사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향철위원장과 외부소통에 단 1회 참석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되지만 국정조사를 계기로 향철위가 사고조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